

건설현장의 산업연수생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200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내 건설경기의 회복세는 건설 인력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가져왔다. 그러나 인력 수급의 양적, 질적 불균형 양상이 나타나 건설업계에서는 호황에도 불구하고 인력난에 의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 과정을 겪으면서 건설 생산 방식과 인력 활용 방식이 과도기적 변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또 올해 들어 건설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하였지만, 전문 또는 숙련 인력에 대한 공급 부족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수의 외국인 근로자(산업연수생 혹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건설현장 투입으로 건설업계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열어준게 사실 하지만 2003년 3월로 예정된 외국인 불법 체류자 출국 조치가 시행되면 건설 인력 공급 부족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 계속되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및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만 땀집식의 단기적 대책만을 발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전문가의 시각.

"현대판 노예제로 탈법, 불법의 온상이 된다", 현행 제도를 보완하자"라며 산업연수 제도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현장을 찾아가 보았다.

〈취재 | 왕희삼 기자〉

건설업 고용 동향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건설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취업자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즉, 2002년 2/4분기 건설투자는 18조 8,363억원 규모로 추정되어 2001년 같은 기간에 비해 4.1% 증가하였고, 2/4분기 중 건설업 평균 취업자수는 177만 4,500명으로 2001년 2/4분기에 비해 10.8%가

증가하였으며, 7월 현재 179만 8,400명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분기별 평균 취업자수는 2001년 3/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고 있었으나 2002년 1/4분기에 12.3%가 증가한 것을 비롯하여 2001년 4/4분기 이후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인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능인력의 노임단가는 2002년 5월을 기준으로 1년만에 13.1%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노임 상승세는 건설투자나 취업자수 상승세를 능가한 수준이며, 99년 9월을 전환점으로 노임 하락세가 반전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 2002년 하반기 건설투자도 5.4% 수준에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취업자수의 증가세와 노임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체류자 22% 건설업 종사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현재 국내에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26만 5,848명의 96%인 25만 5,978명이 불법체류사실을 신고해왔다고 최근 밝혔다.

이중 현재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신고한 외국

인은 5만 5,901명으로 전체의 2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적별로는 중국 15만 1,313명(중국동포 9만 1,736명), 방글라데시 1만 7,087명, 몽골 1만 3,952명, 순으로 92개국에 걸쳐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가 합법보다 이익

연수생의 시간당 임금은 3천원으로 불법 체류자 평균임금 시간당 3,600원의 83% 수준이다. 연수생들이 월평균 340시간 일해 82만 4천원을 버는데 비해 불법 체류자는 272시간 일하고 87만 4천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당수의 산업연수생이 지정된 작업장을 떠



나게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한다.

산업연수가 아닌 취업

연수생 제도는 명칭부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산업연수' (industrial training)란 선진국에서 후진국에 기술을 이전할 때 쓰는 말인데, '일'을 시키므로 '편법'이라는 국제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연수생' 신분으로 들어온 근로자들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불이익을 받는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직업 이동의 자유도 없이 낮은 임금을 감수해야 한다.

한국노동연구원 유길상 부소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 참석하면 낮이 뜨겁다", "왜 연수생에게 일을 시키냐고 물으면서, 그러려면 왜 OECD에 가입했느냐"고도 한다며 우리나라의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고 한다.

선진국에선 산업연수제와 취업제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연수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상화 정책국장은 "대부분 선진국에서 고용허가제나 노동허가제를 운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내놓은 '외국인 산업연수생 정책 개선안'이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기존 안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기관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는 '외국 송출기관의 산업연수생 직접 관리 및 산업연수생 위탁관리업체 폐지', '산업연수생 4만명 조기 입국', '계약이행 보증금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잇따라 발표했다.

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20개 위탁관리업체들은 외국 송출기관의 한국지사나 협력업체의 자격으로 산업연수생 관리를 지속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탁관리업체는 "근본적인 인력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산업연수생이 연수업체를 이탈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위탁관리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송출기관이 영세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위탁관리업체가 송출기관과의 관계를 재설정해 공동 영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산업연수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위해 우리 정부에 지불하는 이행보증금 300달러의 부담이 이들의 연수업체 이탈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이행보증금을 폐지한다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근로자 확보 비상

최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이 신청한 외국인 산업연수생 인력은 1만 4천여명으로 정부에서 추가 배정할 예정인 5천명을 훨씬 넘어섰다고 한다.

현대건설은 300명 가량을 요청했으며, 대우건설과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각각 200명을 신청했다.

건설업체들이 외국인 산업연수생 확보에 열을 올리는 것은 젊은층의 건설현장 취업기피로 기능공 부족이 심각한데다, 건설현장 불법체류자로 집계돼있는 5만 6천여명이 내년 3월 일시에 강제 출국될 경우 공사에 큰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연수생 투입이 가능한 사업비 300억원 이상 규모의 SOC(사회간접자본)공사 등에 당장 필요한 인력은 120명 정도지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요에 대비, 200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공식 접수를 시작하면 신청 인력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며 “외국인 산업연수생 배정을 늘려줘야 기능공 부족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건설교통부도 건설부문의 불법 체류자가 강제 귀국될 경우 현장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증원을 추진 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강제귀국으로 인한 부족인력에 대해서는 추가 증원을 국무조정실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안은 없나

인력난으로 비롯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파문은 고질적인 국내 인력수급의 불균형으로 ‘연수생’이란 이름을 ‘취업생’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인력난은 고령화, 고학력화, 삶의 질 중시 풍조 및

산업구조 고도화와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인력에 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중장기적으로 산업 전반의 인력 공급과 수요에 대한 예측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리고 청년실업자, 여성인력 등 유희인력의 활용, 기존 인력의 질적 개선, 근로환경 개선, 외국인력에 대한 현실적 수요를 감안한 규모의 도입 등 산업인력 활용 전반에 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이미 10여년 전에 인력문제를 장기·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력 확보를 위한 고용관리개선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고용확보, 고용안정, 복지시설 등 고용관리 개선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및 세금경감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동시에 작업환경개선, 근로조건의 향상 등 수요자 측면에서의 지원도 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태황 연구원은 “취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건설 인력 수급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기업은 체계적인 직무분석을 통해 인력 수요의 범위와 수준을 파악하고 적정 수준의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인력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또 “정부와 건설 관련 단체들은 가용 인력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단기적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는 한편, 중장기적 인력 수급 변화를 예측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능동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고 지적한다.

앞으로 건교부와 대한건설협회에서 마련중인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 개선안’이 2003년 1월 발표될 예정이다. 좀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발표되어 업계와 근로자 모두 만족했으면 한다. 